생물테러 차단 보안지침 마련

스위스 제약업계, 실험실 접근통제에 특정물질 사용금지

스위스 주요 제약업계는 위험 화학물질이 테러범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양대 다국적 제약기업인 Novartis와 Roche, 그리고 세계적인 생명과학기업인 세로노 등이 합의·서명한 보안지침은 실험실 접근권 통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위스제약회사협회인 인터파르마는 지침의 목적이 3사가 비축·제조한 제품들이 생물무기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르마의 토머스 쿠에니 사무총장은 "스위스는 세계 제약분야에서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분야에서도 앞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약업계의 보안지침은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약업계의 생물테러 위협 차단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규제지침은 미국의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침에 관한 최초의 구상은 2002년 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동안에 제약업계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대표들간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생물테러 위협에 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머세 레이놀즈 스위스 주재 미국대사는 스위스 제약기업들이 생물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쿠에니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약기업들의 보안지침이 유엔생물무기협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쿠에니 사무총장은 생물 물질의 오·남용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다자간 국제협약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스위스 제약업계의 보안지침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치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군축회의는 7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생물무기협약의 이행문제를 다루는 검증의정서 초안을 마련했으나 국제사찰단에 의한 자국 실험실에 대한 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3>